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4. 1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1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괄)	9
III.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11
IV.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23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38
VI. 심층 분석	40
VII. 향후 계획	44

붙임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등급표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1.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 목적 및 근거

- (목적) 지방의회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측정·평가하여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 기관

- 총 243개 지방의회 : 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시·군·구)

□ 평가체계

-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설문)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청렴체감도 (80%)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청렴노력도 (20%)	√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 시책 효과성 평가
부패실태 감점 (최대 10%)	√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24년 평가 방향

- 지방의회 최초 전수평가에 따라 청렴노력도 평가 최초 실시 의회가 상당수인 점을 고려하여, 종합청렴도 중 노력도 비중(20%)*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

* 지방의회 수행업무, 조직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 반영 비중(20%)은 타 공공기관(40%)과 다르게 설정

○ 청렴노력도 별도 지표체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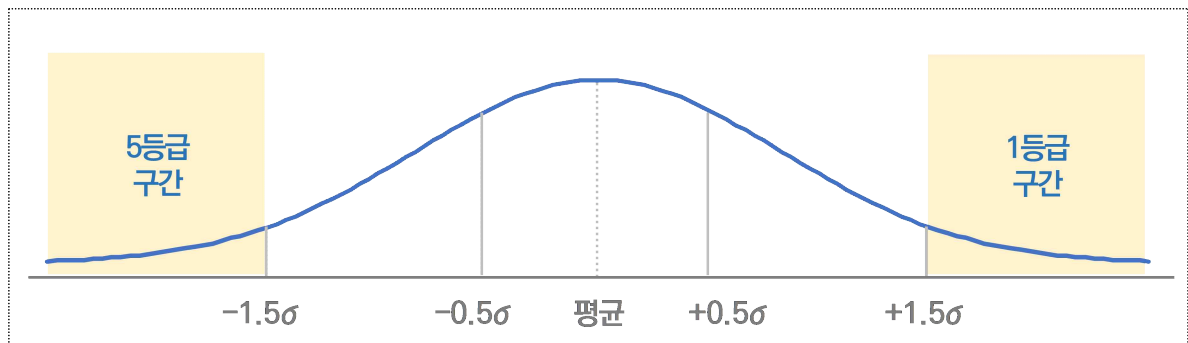
- 지방의회의 규모·업무 특성·인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상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위한 필수 지표 위주로 평가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유형의 청렴노력도 세부 지표 중 약 67%를 지방의회 지표로 반영

□ 결과 산정

-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 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단, 표준편차로 인해 1등급선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등급선은 100점으로 함

- 광역의회 17개 단일유형, 기초의회는 I 유형(시) 75개, II 유형(군) 82개, III 유형(구) 69개 3개 유형

2. 청렴체감도 평가 개요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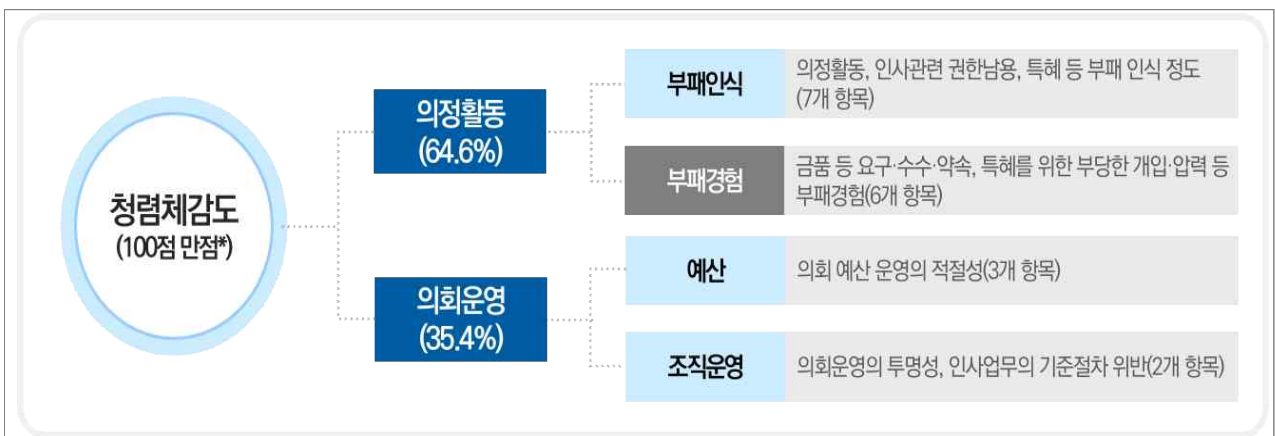
-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정활동, 의회운영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

구분	내용
측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관련 공직자) 지방의회, 지자체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 ▶ (단체 및 전문가)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이익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 (지역주민) 해당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인식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 (방법) 전화,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률 제고

□ 평가 모형

- (전체) 의정활동(64.6%) 영역과 의회운영(35.4%) 영역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가중합산

< 청렴체감도 측정 체계 >



* 종합청렴도의 80% 비중으로 반영

- (의정활동)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

< '24년 의정활동 측정 항목 >

구분		세부항목	가중치
의정활동	부패 인식	•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17.8%
		• 인사 청탁·개입	18.2%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16.5%
		•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11.6%
		•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7.2%
		•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13.8%
		•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14.9%
	부패 경험	•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31.3%
		•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19.4%
		•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9.9%
		•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13.1%
		•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11.3%
	•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	15.0%	

- (의회운영)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인사 위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

< '24년 의회운영 측정 항목 >

구분		세부항목	가중치
의회운영	예산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44.1%
		• 외유성 출장	31.2%
		• 공용물 등 사적이용·목적외 사용	24.7%
	조직운영	• 투명한 업무처리	48.2%
		•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51.8%

□ 평가 방법 (설문조사)

- 설문 대상자 : 총 80,981명

구분	규모(명)	조사대상
직무관련 공직자	20,314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 * 의회 직원 2,484명,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직원 17,830명
단체 및 전문가	20,864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전문가 등 * 단체 13,867명, 전문가 6,997명
지역주민	39,803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 이·통장 11,696명, 일반주민 28,107명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설문
* '23. 7. 1. ~ '24. 6. 30.
- 조사 방법 : 전화,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24. 8월 ~ 11월
- 신뢰 수준 : 직무 관련 공직자 95%, ±1.6점/ 단체 및 전문가 95%, ±0.9점/
지역주민 95%, ±0.7점

3. 청렴노력도 평가 개요

□ 개요

- 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을 사전 설정된 지표를 통해 평가하여 반부패 시책의 자율적 추진 기반 마련하고 반부패 노력을 유도

□ 평가 모형

- 지방의회의 업무 특성, 인적 구성 등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핵심지표 위주로 구성된 특화모형 적용(총 8개 지표)

○ 추진체계(1개) - 추진실적(6개) - 시책효과성(1개)으로 구성



< 청렴노력도 세부 지표 >

연번	구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
1	추진체계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25점
2	추진실적	② 부패 유발요인 정비	15점
3	추진실적	③ 부패방지 제도 구축	20점
4	추진실적	④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10점
5	추진실적	⑤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20점
6	추진실적	⑥ 가점 지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등	각 1~5점 (최대 9점)
7	추진실적	⑦ 감점 지표 -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등	각 1~6점 (최대 15점)
8	시책 효과성 평가	⑧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	10점

□ 평가 방법

○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별도 용역) 및 내부(소관 부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

- 기관의 이의제기 및 검토, 국민권익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실적 확인 후 기관별 청렴노력도 점수 산출

※ 대상기간 : '23. 10. 1. ~ '24. 9. 30.

○ 시책 효과성 평가 지표는 설문조사 결과 활용

4. 부패실태 평가

□ 개요

- 평가기간('23. 7. 1.~'24. 11월) 중 발생한 기관의 부패사건 현황을 점수화하여 평가에 반영

※ 자세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 평가 기준

- (대상)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상감경 불문경고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협의)가 확인된 사건
 -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통보한 부패사건
- (유형) 반부패 법령* 관련 부패사건,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사건, 기관장·고위직의 직무관련 성 비위 사건
 -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반영)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외부적발(국민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상급 감독기관, 언론 등) 사건 반영

□ 평가 방법

- (정량) 부패행위자의 직위, 기관 총 부패금액, 기관 정원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
 - * 3년 이내('22년~'24년) 발생한 사건은 가중,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감경 반영
- (정성) 주요 부패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현장, 서면)를 통해 정성평가

- ※ (주요 부패사건)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외부적발) 전체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5건) 이상, 외부 적발비율 50% 초과

5.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 개요

- 종합청렴도 평가과정에서 호의적 답변 유도, 각종 자료 누락·조작, 지연제출 등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제재
 - ※ 자세한 제재기준·규모 및 방법은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 제재 대상

- (유형) 명부 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허위·조작 제출 등
 - ※ 대상기관 현지점검, 상시 제보 및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응답 등을 통해 적발

□ 제재 방법

-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제재 조치 필요성 및 정도(주의·경고, 감점 등) 심의·결정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괄)

□ 종합청렴도 점수 현황

○ 2024년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9.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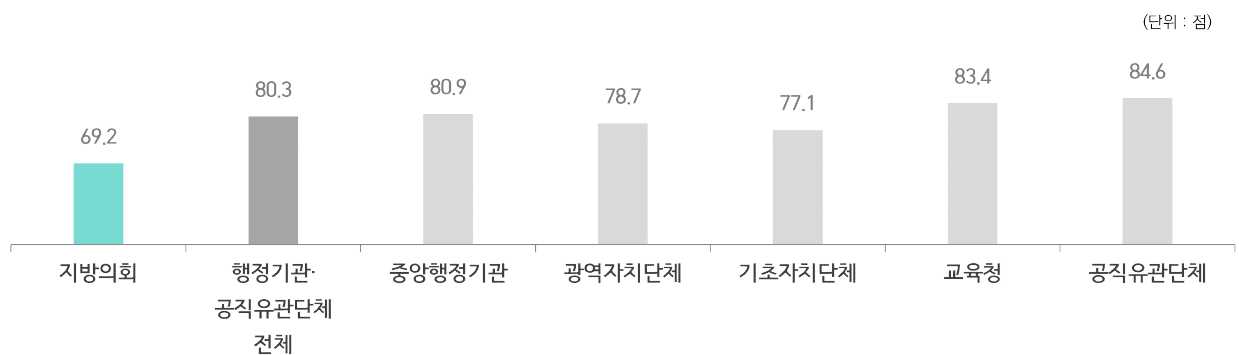
- 점수가 높을수록(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을 의미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전수조사 첫해로 '23년과 평가대상 기관이 달라 '23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락 및 시계열 분석 미 실시

○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3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낮은 점수인 기초자치단체(77.1점)보다도 7.9점 정도 낮은 수준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



□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은 66.5점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75.0점)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5.7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부패경험률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19.38%)이 가장 높고,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11.01%),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0.43%) 순으로 높음

-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인사 위반 정도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은 68.9점
 - '공용물 등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77.4점) 항목이 가장 높고, '외유성 출장'(63.0점) 항목이 가장 낮음
- 응답자 유형별로는 단체 및 전문가(77.0점), 지역주민(65.9점), 직무 관련 공직자(60.3점) 순으로 나타남

□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 전체의회의 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는 77.8점
- 총 8개 평가지표 중 '부패 유발요인 정비' 지표가 가장 높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지방의회 최초 전수평가 실시에도 불구하고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마련,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지표 이행률이 높음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 등의 지표 달성률은 저조

<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별 점수 >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	부패유발 요인정비	부패방지 제도 구축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가점	감점	시책 효과성 평가	종합
72.3	90.1	72.4	56.3	85.8	+3.1	-0.2	62.0	77.8

□ 부패실태 평가 (감점)

- 19개 기관에서 23건이 발생하여 감점기관 기준 평균 2.4점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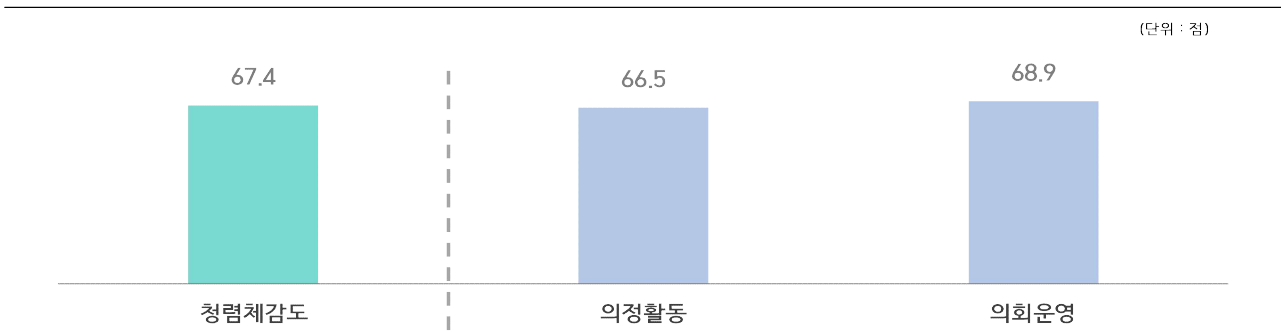
- 청렴노력도 실적 제출 지연으로 31개 기관 평균 1.0점 감점

III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1. 청렴체감도 영역 전반

- 전체 지방의회 청렴체감도는 100점 만점에 **67.4점**
-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은 66.5점(가중치 64.6%),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인사 위반 정도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은 **68.9점**(가중치 35.4%)
- 청렴체감도 영역 중 의회운영 영역(68.9점)이 의정활동 영역(66.5점) 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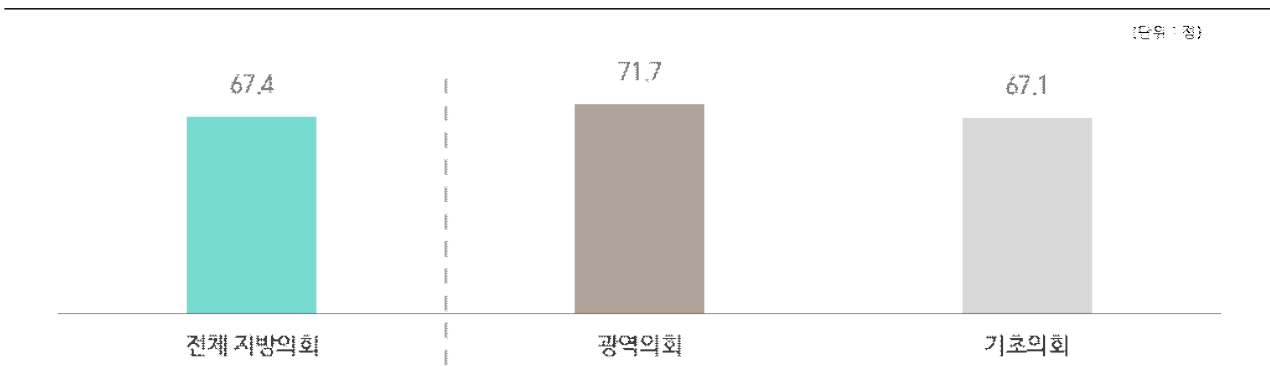
<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및 영역별 점수 >



※ 점수가 높을수록(10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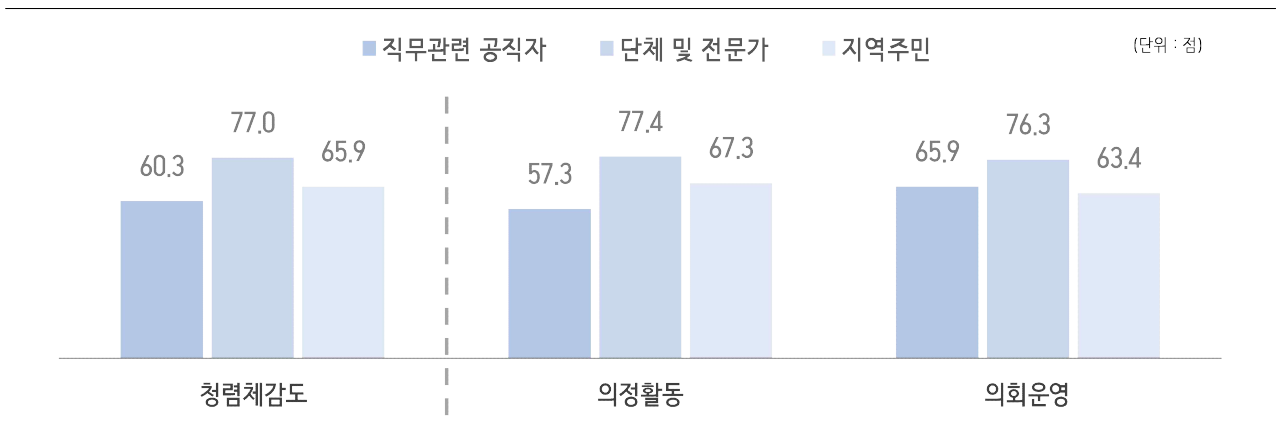
- 광역의회(71.7점)의 청렴체감도 점수가 기초의회(67.1점) 보다 높음

< 기관 유형별 청렴체감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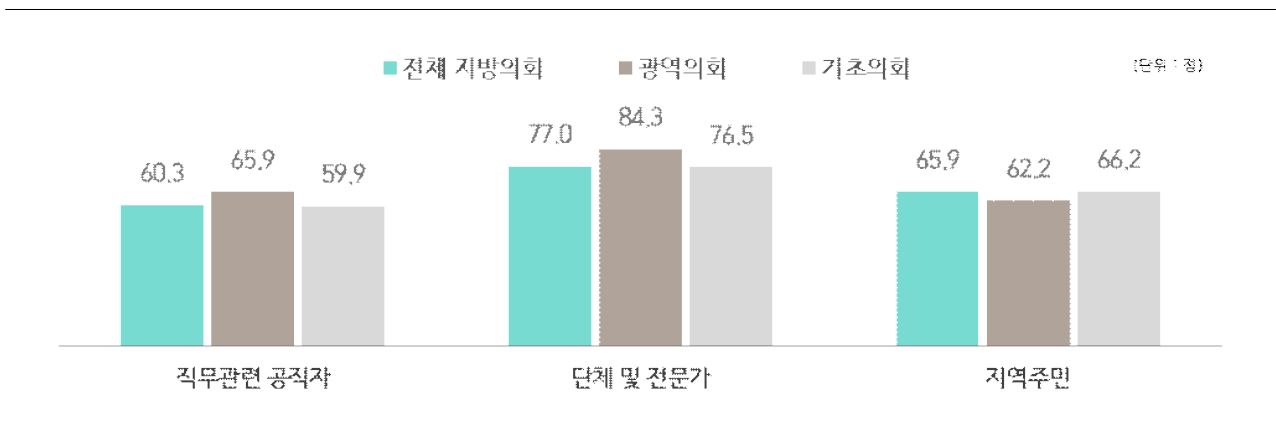
- (응답자 유형별) 전체 지방의회의 청렴체감도는 단체 및 전문가 (77.0점) 점수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65.9점), 직무 관련 공직자(60.3점) 순
-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영역 모두 단체 및 전문가가 가장 높게 평가
- 측정 영역별로 보면,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은 의정활동을, 직무 관련 공직자는 의회운영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응답자 유형별·영역별 청렴체감도 점수 비교 >



- (기관 유형별) 직무 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는 광역의회를, 지역주민은 기초의회를 더 높게 평가

< 응답자 유형별·기관 유형별 청렴체감도 점수 비교 >



2. 의정활동

[1] 전반

- 의정활동 영역의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66.5점**
-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총 13개 항목으로 측정
- ※ 의정활동은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로 부패경험의 경우 최대 15점 감점으로 변환하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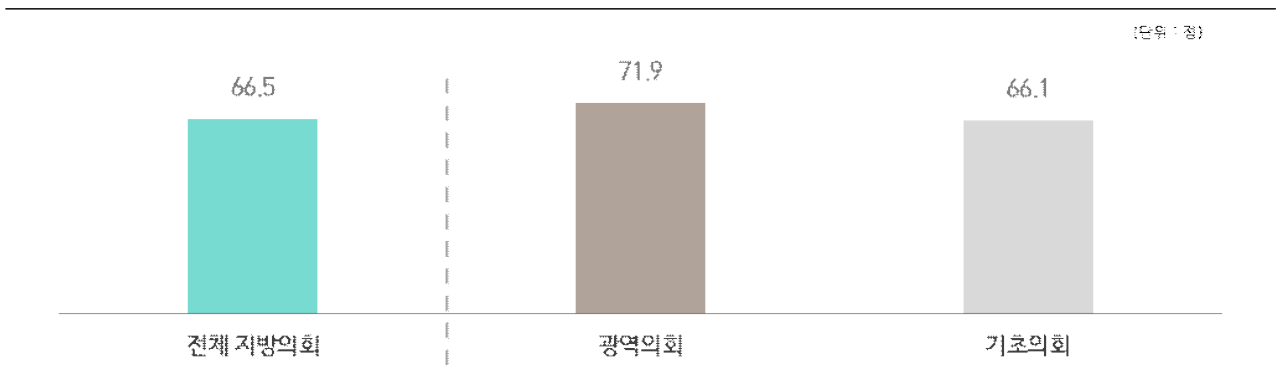
< 의정활동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부문	항목(가중치)	전체	광역	기초
의정활동 점수		66.5	71.9	66.1
부패 인식		71.0	75.1	70.7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0.178)	72.9	75.8	72.6
	인사 청탁·개입(0.182)	72.7	78.7	72.3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0.165)	68.0	72.2	67.6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0.116)	65.7	69.8	65.4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0.072)	73.1	74.9	73.0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0.138)	69.1	71.6	68.9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0.149)	75.0	80.3	74.6
부패 경험 감점(최대 15점)		-4.5	-3.2	-4.6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0.313)	77.4	86.6	76.7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0.194)	79.2	83.2	78.9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0.099)	64.3	77.1	63.3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0.131)	62.6	69.5	62.0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0.113)	56.9	65.6	56.3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0.150)	64.6	76.8	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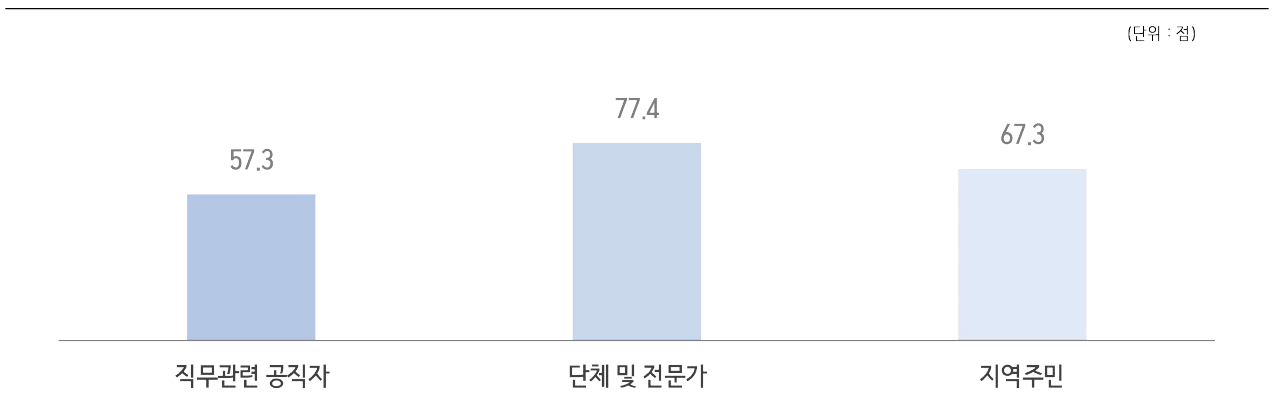
○ 의정활동 영역 점수는 광역의회(71.9점)가 기초의회(66.1점)보다 높음

< 기관 유형별 의정활동 점수 >



○ 응답자 유형별로 보면, 단체 및 전문가(77.4점)가 지역주민(67.3점), 직무 관련 공직자(57.3점)보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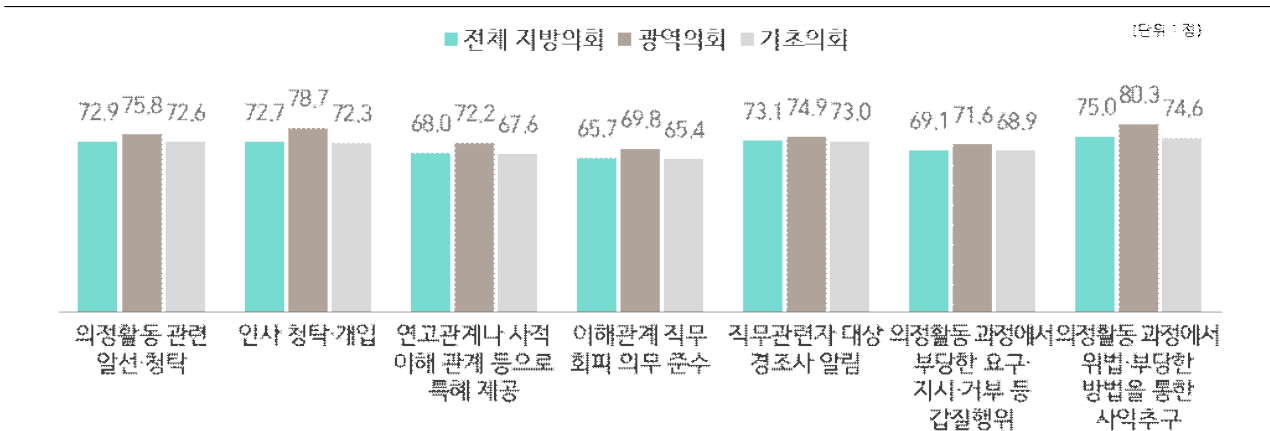
< 응답자 유형별 의정활동 점수 >



(2) 부패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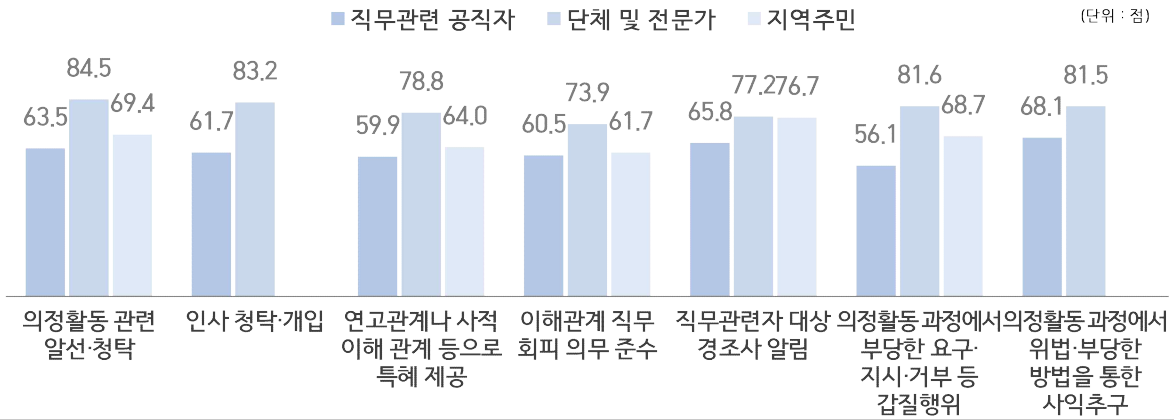
-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인식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0점
- (항목별)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75.0점)가 가장 높고,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5.7점)가 가장 낮음
- (기관 유형별) 광역의회(75.1점)가 기초의회(70.7점)보다 높은 수준
 - 모든 항목에서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높게 나타남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점수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난 항목은 ‘직무 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광역 74.9점, 기초 73.0점)이고, ‘인사 청탁·개입’(광역 78.7점, 기초 72.3점) 항목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큼

<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



- (응답자 유형별) 직무 관련 공직자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68.1점), 단체 및 전문가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84.5점), 지역주민은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76.7점) 점수가 가장 높음
 - 전반적으로 단체 및 전문가의 점수가 직무 관련 공직자, 지역주민에 비해 높은 편

<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인식 응답자 유형별·항목별 점수 비교 >



※ ‘인사 청탁·개입’,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항목은 지역주민 미측정

< 참고 >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인식 점수 시계열 분석

- (대상) '23년 측정 대상 기관이었던 광역의회와 기초 시 의회
- (결과) '23년 대비 **광역의회**는 7개 항목 중 5개 항목의 점수가 하락하는 등 부패인식이 **다소 악화**되었으며, **기초 시 의회**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
 - 광역의회는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기초 시 의회는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항목이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는 광역의회와 기초 시 의회 모두 소폭 개선

<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인식 기관 유형별·항목별 비교('23년 ~ '24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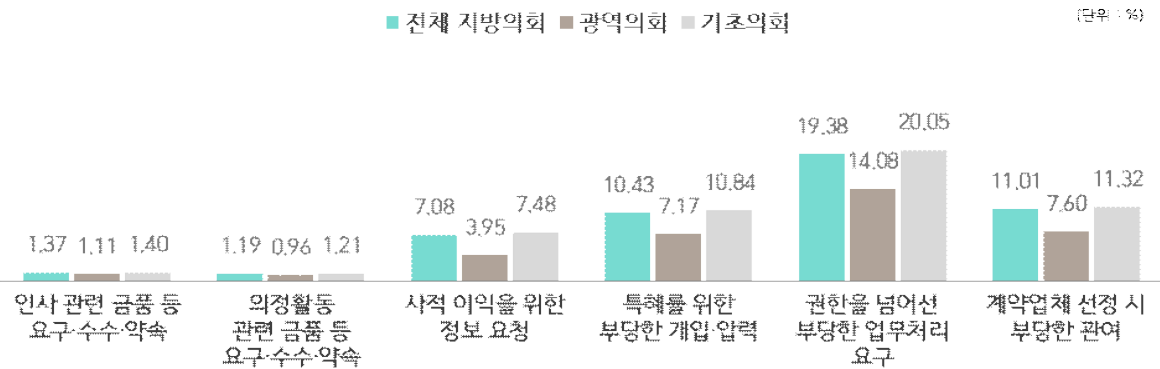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광역의회			기초의회(시)		
	'23	'24	변화	'23	'24	변화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76.4	75.8	-0.6	71.5	71.2	-0.3
인사 청탁·개입	79.4	78.7	-0.7	69.8	70.0	+0.2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71.6	72.2	+0.6	65.9	65.9	-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69.5	69.8	+0.3	63.0	63.9	+0.9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76.6	74.9	-1.7	71.6	72.0	+0.4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72.6	71.6	-1.0	67.6	66.9	-0.7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80.4	80.3	-0.1	72.4	72.0	-0.4

(3) 부패경험

-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은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9.38%)가 가장 높고,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11.01%) 순
- 기초의회의 부패경험률이 모든 항목에서 광역의회보다 높음
 - ※ 광역의회 항목별 부패경험률 보다 약 1.3배~1.9배 높은 수준

<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 항목별 현황 >



※ 부패경험률이 낮을수록 청렴함(긍정적)을 의미

< 참고 >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 시계열 분석

- (대상) '23년 측정 대상 기관이었던 광역의회와 기초 시 의회
- (결과) '23년 대비 광역의회 및 기초 시 의회의 부패경험률이 모두 증가
 - 특히, 광역의회 및 기초 시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광역의회 4.96%p, 기초 시 의회 2.13%p)

< 기관 유형별 부패경험률 추이('23년~'24년) >

구분	광역의회			기초의회(시)		
	'23 (%)	'24 (%)	변화 (%p)	'23 (%)	'24 (%)	변화 (%p)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0.70	1.11	+0.41	1.20	1.44	+0.24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0.47	0.96	+0.49	1.11	1.29	+0.18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1.69	3.95	+2.26	5.94	8.13	+2.19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3.85	7.17	+3.32	9.55	11.46	+1.91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9.12	14.08	+4.96	18.23	20.36	+2.13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4.56	7.60	+3.04	11.15	12.16	+1.01

- (부패경험자 빈도·규모)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항목의 부패경험자 1인당 평균 빈도는 연간 약 2.3회, 평균 규모는 41.8만원
- 부패경험률이 가장 높은 항목인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경험율 19.38%)의 경우 경험자 1인당 평균 빈도(3.91회)도 가장 많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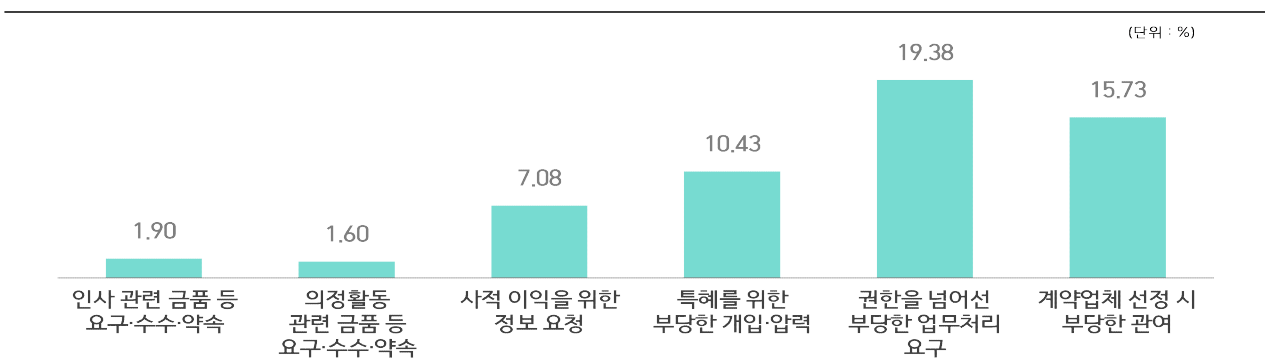
<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 빈도 및 규모 >

구분	경험률 (%)	총빈도 (회)	총규모 (만원)	응답자 1인당 평균빈도 (회)	경험자 1인당	
					평균빈도 (회)	평균규모 (만원)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1.37	1,267	20,256	0.03	2.24	35.85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1.19	1,135	20,508	0.03	2.31	41.77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7.08	4,332	-	0.21	3.01	-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10.43	6,790	-	0.33	3.21	-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19.38	15,372	-	0.76	3.91	-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11.01	15,076	-	0.37	3.33	-

※ 부패경험 빈도 및 규모는 참고지표로 점수에는 미반영

- (응답자 유형별) 직무 관련 공직자의 부패경험률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9.38%) 항목이 가장 높고,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15.73%) ,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0.43%) 순

< 직무 관련 공직자 부패경험률 현황 >



- 단체 및 전문가의 부패경험률은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가 6.40%로 가장 높고,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이 0.84%,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0.79%

3. 의회운영

(1) 전반

- 의회운영 영역의 청렴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8.9점**
 - 의회운영 영역의 세부 측정 부문 중 예산은 70.0점, 조직운영은 66.9점
-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인사 위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총 5개 항목으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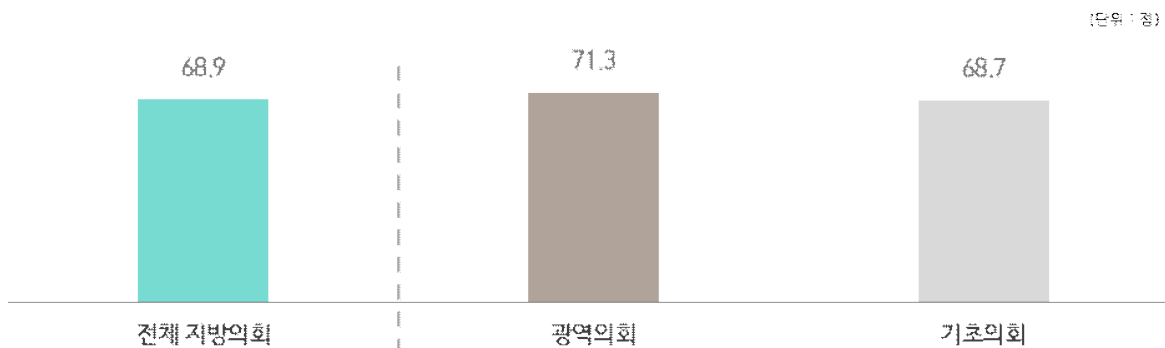
< 의회운영 영역의 항목별 점수 >

(단위 : 점)

부문	항목(가중치)	전체	광역	기초
의회운영 점수		68.9	71.3	68.7
예산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0.441)	70.9	72.9	70.8
	외유성 출장(0.312)	63.0	65.0	62.9
	공용물 등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0.247)	77.4	78.0	77.3
	조직운영	66.9	70.4	66.6
투명한 업무처리(0.482)	투명한 업무처리(0.482)	66.5	70.1	66.3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0.518)	67.2	70.8	6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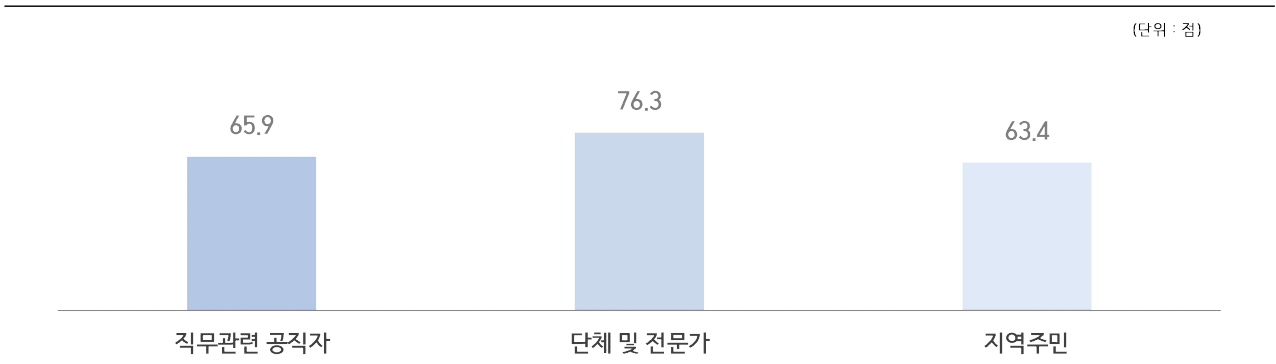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 광역의회의 의회운영 영역 청렴체감도 점수(71.3점)가 기초의회(68.7점) 보다 높게 나타남

< 기관 유형별 의회운영 영역 청렴체감도 점수 >



- (응답자 유형별) 단체 및 전문가의 점수(76.3점)가 가장 높았으며, 직무 관련 공직자(65.9점), 지역주민(63.4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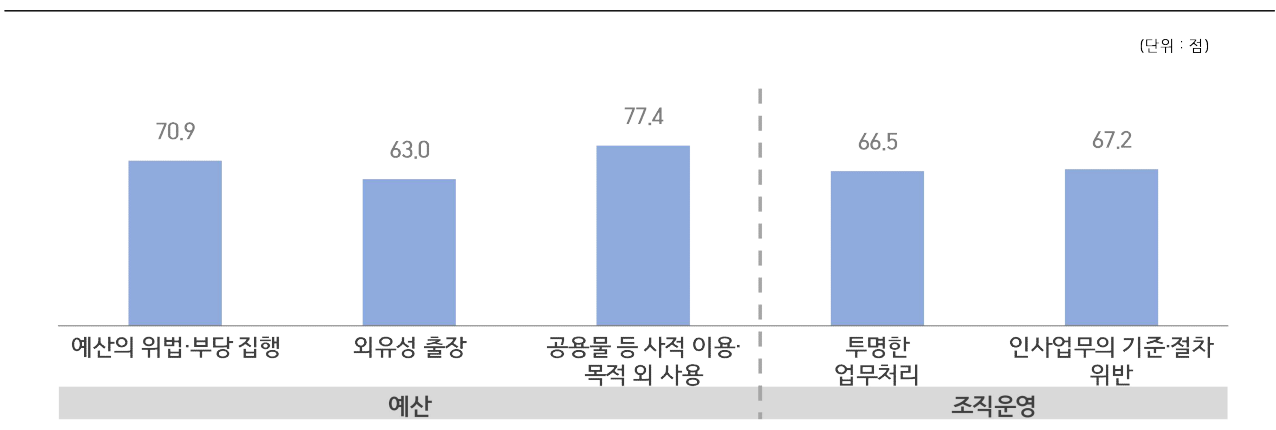
< 응답자 유형별 의회운영 영역 청렴체감도 점수 >



[2] 예산 및 조직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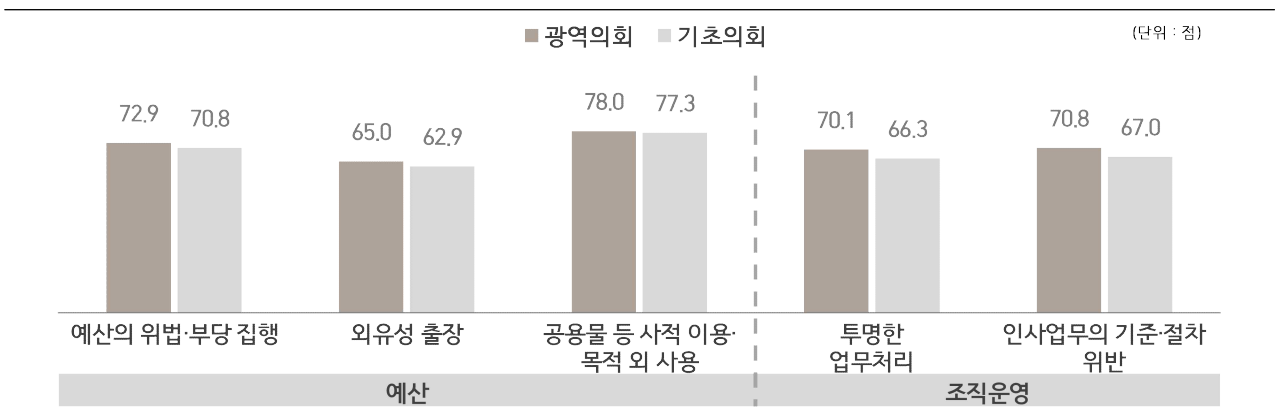
- (예산 부문) '공용물 등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77.4점)이 가장 높고, '외유성 출장'(63.0점)이 가장 낮은 점수
- (조직운영 부문)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67.2점)이 '투명한 업무처리'(66.5점)보다 높게 평가

< 의회운영 영역의 세부 항목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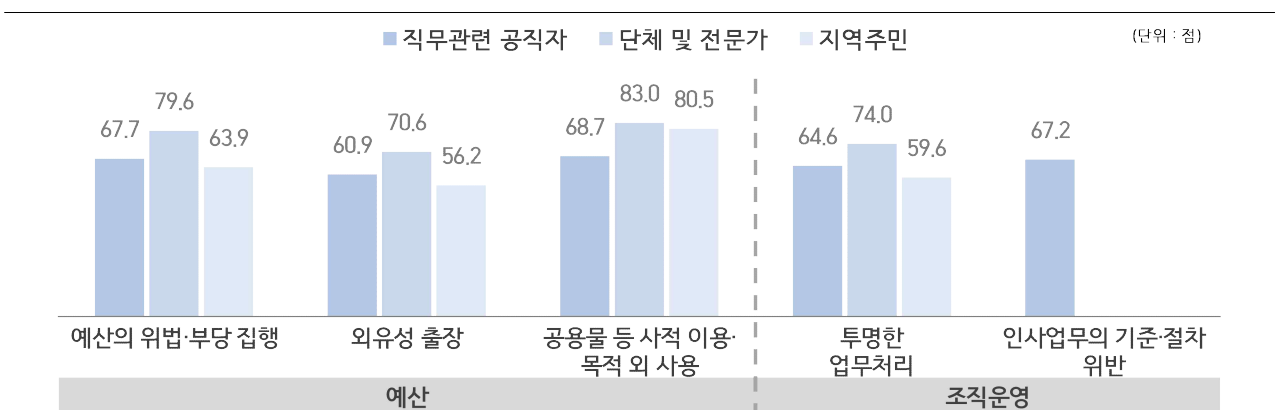
- (항목별) 의회운영의 모든 항목에서 광역의회가 기초의회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투명한 업무처리'(광역 70.1점, 기초 66.3점)와 '인사업무의 기준·절차위반'(광역 70.8점, 기초 67.0점)임

< 기관 유형별 의회운영 항목별 점수 >



- (응답자 유형별) 단체 및 전문가가 다른 응답자 유형보다 대부분의 항목을 높게 평가하였고, '공용물 등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83.0점) 항목을 가장 높게 평가
- 직무 관련 공직자는 '공용물 등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68.7점)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고, 지역주민은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63.9점), '투명한 업무처리'(59.6점), '외유성 출장'(56.2점)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

< 응답자 유형별 의회운영 영역 항목별 점수 >



※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항목은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미측정

〈 참고 〉 의정운영 영역의 항목별 시계열 분석

- (대상) '23년 측정 대상 기관이었던 광역의회와 기초 시 의회
- (결과) '23년 대비 광역의회와 기초 시 의회 모두 의회운영 점수가 다소 하락
 -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항목에서 광역의회가 크게 하락(-3.4점)했고, 기초 시 의회도 1점 이상 하락(-1.2점)

< 기관 유형별 의회운영 영역 항목별 비교('23년 ~ '24년) >

(단위: 점)

구분		광역의회			기초의회(시)		
		'23	'24	변화	'23	'24	변화
예산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73.4	72.9	-0.5	69.7	69.7	-
	외유성 출장	64.7	65.0	+0.3	61.3	60.8	-0.5
	공용물 등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78.7	78.0	-0.7	76.0	76.0	-
조직 운영	투명한 업무처리	69.8	70.1	+0.3	64.7	64.9	+0.2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74.2	70.8	-3.4	65.8	64.6	-1.2

IV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1. 청렴노력도 영역 전반

- 전체 지방의회의 청렴노력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77.8점
 - (기관 유형별) 광역의회(92.7점)가 기초의회(76.7점)보다 높게 나타남
 -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모형과 지표가 달라 점수 단순 비교 불가
- (지표별) 추진체계, 추진실적, 시책 효과성 평가 3개 부문 8개 지표 중 ‘부패 유발요인 정비’(90.1점)가 가장 높고,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56.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 ‘부패유발요인 정비’ 지표는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조항’을 자체 규정으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표임

< 청렴노력도 각 지표별 점수 >

(단위 : 점)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청렴노력도 지표		77.8	92.7	76.7
추진체계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72.3	82.5	71.6
	② 부패 유발요인 정비	90.1	99.3	89.4
추진실적	③ 부패방지 제도 구축	72.4	85.3	71.5
	④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56.3	88.2	53.9
	⑤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85.8	97.3	84.9
	⑥ 가점지표	3.1	5.9	2.9
	⑦ 감점지표	-0.2	-0.1	-0.2
시책 효과성	⑧ 반부패 시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	62.0	67.8	61.5

2. 지표별 평가 결과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평가 지표) 기관의 업무·조직 특성, 청렴도 결과 분석 등을 통한 자율적 추진계획 수립 및 조직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① 반부패 시책 추진의 적정성·다양성·참신성 ②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등

- (평가 결과)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의 평균 점수는 72.3점

- 광역의회의 평균 점수는 82.5점, 기초의회의 평균 점수는 71.6점

- (주요 성과) 243개 지방의회 중 239개 지방의회(98.4%)가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청렴수준 및 여건 분석, 중점 추진 방향 및 개선 계획을 설정하는 등 반부패·청렴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지방의회의 업무 특성 및 조직 내·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한 부패 취약 분야 분석 및 대책 마련·추진으로 기관의 청렴수준 향상 노력 강화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등급이 높을수록 청렴체감도 및 시책 효과성 점수도 높게 나타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보여줌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적별 청렴체감도·시책 효과성 점수 현황 >

구분	기관 수	청렴체감도(점)			시책 효과성 (점)
		청렴체감도	의정활동	의회운영	
전체	(243)	67.4	66.5	68.9	62.0
1등급	(18)	69.4	69.0	70.1	64.5
2~3등급	(74)	68.2	67.5	69.4	63.3
4~5등급	(112)	67.2	66.3	69.0	61.7
6~7등급	(35)	65.8	64.7	67.6	59.6
미제출	(4)	63.2	61.9	65.4	55.7

○ (보완사항)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진단·분석이 보다 다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추진으로 연계 필요

* 기관별 자체청렴도 평가 결과, 감사 지적사항 분석,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

- 일부 기관은 부패 취약분야 진단을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만 국한되어 심층적인 진단 미흡
- 또한, 세부 추진과제의 구체성을 보완하여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과제 발굴 노력 강화 필요

《 주요사례 》

① [충청남도 당진시 의회] 전략적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조직 내·외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
- 전년도 실천과제 효과성 분석을 통해 과제 수립의 타당성 제고
-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의원·직원 대상 상황 조치 훈련 및 행위 기준 점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② [경상북도 청송군 의회] 청렴수준 종합진단 및 환류 시스템 구축

- 청렴수준 분석을 위해 전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청송군 의회 청렴도 결과 예측, 대·내외 환경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다양한 분석수단 활용
- 법·제도·정책 변화에 따른 세부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고, 청렴 성과평가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는 등 환류 방안 제시

(2) 부패유발요인 정비

- (평가 지표)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 노력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을 평가
- (평가 결과)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31개 조항 중 평균 26.4개 조항이 반영되어 90.1점
 - 185개(76.1%) 지방의회는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31개 조항 전체를 기관 자체 규정으로 반영

< 기관 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 수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개)						점수 (점)
		100%	50% 이상	50% 미만	0%	미제출	평균 반영 수	
전체	(243)	185	21	8	27	2	26.4	90.1
광역의회	(17)	16	1	0	0	0	30.9	99.3
기초의회	(226)	169	20	8	27	2	26.1	89.4

- (주요 성과) 지방의회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근거규정 마련 및 확산을 통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 개입 소지 감소
- (보완 사항) 27개 지방의회(11.1%)는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 실적이 0%, 2개 지방의회(0.8%)는 자료 미제출하여 관련 규정을 미반영한 기관 대상 사전 컨설팅 안내 등으로 독려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전체 또는 일부 반영

《 주요사례 》

-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 전라남도 장성군 의회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사전 예비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만의 별도 규정을 마련

(3) 부패방지 제도 구축

- (평가 지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부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부패방지 제도개선 세부 권고과제 이행률을 평가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22. 12. 19.)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대한 세부 권고과제 이행완료 비율로 평가
 - ※ 세부 권고과제 : 1) 지방의회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2) 지방의회의원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전액 또는 일부 감액)
- (평가 결과) 부패방지 제도 구축의 평균 점수는 72.4점으로 132개 (54.3%) 지방의회는 두 개의 세부 권고과제를 모두 이행
 -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내용을 반영한 지방의회(220개, 90.5%)가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내용을 반영한 지방의회(132개, 54.3%)보다 많음

< 기관 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 수	징계 시 감액 조항(개, %)		구속 시 감액 조항(개, %)		점수 (점)
		이행 기관 수	비율	이행 기관 수	비율	
전체	(243)	132	54.3	220	90.5	72.4
광역의회	(17)	13	76.5	16	94.1	85.3
기초의회	(226)	119	52.7	204	90.3	71.5

- (주요 성과) 절반 이상의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의정비 지급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청렴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보완사항) 23개 지방의회(9.5%)는 제도개선 세부 권고과제 2건을 모두 미이행하거나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이행점검 필요

《 주요사례 》

①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회, 충청북도 옥천군 의회

- 일반적인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비를 전액 미지급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보다 엄격하게 조례 개정

[4]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 (평가 지표)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 행위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 자체점검 및 실태점검 시 자료제출 이행 여부 평가
- (평가 결과)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의 평균 점수는 56.3점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전체 지방의회는 평균 1.1회 실시하였고,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한 지방의회는 120개(49.4%)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시 자료를 전부 제출한 지방의회는 208개(85.6%)이고, 미제출한 지방의회 35개(14.4%)에 대해 감점 반영

< 기관 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 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개, 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개)			점수 (점)
		연 2회	연 1회	0회 및 미제출	평균	전부제출	일부제출	미제출	
전체	(243)	120	36	87	1.1	208	0	35	56.3
광역의회	(17)	15	0	2	1.8	17	0	0	88.2
기초의회	(226)	105	36	85	1.1	191	0	35	53.9

- (주요 성과)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 행위기준 준수 여부 등 기관 자체점검을 통해 지방의회의 부패 취약분야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정착 기반 마련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자체점검 실적이 많을수록 청렴체감도 항목 중 이해충돌 관련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제도 운영 노력이 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 실적별 관련 청렴체감도 항목 점수 >

구분	기관 수	청렴체감도(점)		
		직무 회피의무 준수	특혜제공	사익추구
전체	(243)	65.7	68.0	75.0
2회	(120)	66.7	68.9	76.1
1회	(36)	66.5	68.3	75.5
0회 (미제출포함)	(87)	64.0	66.5	73.2

- (보완사항) 87개(35.8%) 지방의회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현황 자체점검을 미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 노력 필요

《 주요사례 》

- ① [전라남도 여수시 의회] 점검 후속조치 이행 등 내실 있는 운영 노력
 - 상세한 점검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까지 이행해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
- ②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의회] 세부 점검항목 설정 등 적극적 점검 시행
 - 세부 점검항목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점검 내역 및 결과를 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는 등 점검을 적극적으로 이행

[5]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평가 지표)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을 평가하고, 직무상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해 행동강령 대면집합교육 실시 여부 평가

*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사무처 3급 이상(광역의회) 공직자(기초의회 4급 이상)

- (평가 결과)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의 평균 점수는 85.8점
 - 평가 대상 전체 지방의회의원 및 고위직(3,970명)의 89.7%(3,560명)가 청렴교육을 이수
 - ※ 100% 이수율을 보인 지방의회는 152개(62.6%)
 -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집합교육은 지방의회 평균 0.6회 실시, 128개 지방의회에서 1회 이상 실시

< 기관 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 수	고위직 이수율(명, %)			대면 집합교육 실시(개, %)		점수 (점)
		대상 인원	이수 인원	이수율	1회 이상 실시	실시율	
전체	(243)	3,970	3,560	89.7	128	52.7	85.8
광역의회	(17)	886	862	97.3	16	94.1	97.3
기초의회	(226)	3,084	2,698	87.5	112	49.6	84.9

- (주요 성과) 반부패 법령·제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이해를 제고하여 업무에 맞춘 반부패 전략과 원칙을 수립하는 기반을 제공
 - 청렴교육 이수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갑질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의 기회 마련
 - ※ 교육 이수율 : ('23) 76.8% → ('24) 89.7%, 12.9%p 증가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이 높은 지방의회는 청렴체감도가 높으며, 청렴교육이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 시책 효과성 지표 중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점수가 높게 나타남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실적별 관련 청렴체감도 항목 점수 >

구분	기관 수	청렴체감도(점)			시책 효과성(점)	
		청렴체감도	의정활동	의회운영	종합	기관장 의지와 노력
전체	(243)	67.4	66.5	68.9	62.0	61.9
100% 이수	(152)	68.2	67.3	69.6	63.4	63.4
0~100% 미만	(91)	66.1	65.2	67.7	59.5	59.5

○ (보완사항) 일부 지방의회는 일회성 교육을 통해 이수율 충족에만 그치는 등 형식적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또한, 22개(9.1%) 지방의회는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이 0%이고, 113개(46.5%) 지방의회에서는 행동강령 교육을 미실시하는 등 청렴교육 이수율이 저조하여 고위직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 필요

※ 실적자료 미제출 지방의회 2개는 교육 미실시 지방의회에서 제외

《 주요사례 》

① [서울특별시 의회] 의정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진행

- 서울특별시 의회는 지방의회 중 지방의회의원 등 부패방지교육 이수대상이 가장 많은 기관(112명)으로 이행관리에 애로가 있음에도 교섭단체별 연찬회, 상·하반기 의정활동과 연계한 집합교육 등을 진행하여 교육대상 인원 112명 전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 이수 달성

② [충청남도 논산시 의회] 다양한 교육 방식 활용

- 하반기 의정연수,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워크숍, 전 직원 청렴 특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행동강령 집합교육 실시

[6-1] 가점지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평가 지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 실적 평가
- (평가 결과) 104개(42.8%) 지방의회는 조례에 근거해 행동강령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중 20개(8.2%) 지방의회에서 2회 이상 회의 개최
 - 104개(42.8%) 지방의회에서 가점을 받았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지방의회 20개(8.2%), 1회 이하 회의를 개최한 지방의회는 84개(34.6%)

< 기관 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 수	운영현황(개, %)		회의 개최 횟수(회)		점수 (점)
		설치 기관 수	비율	설치기관 기준	전체기관 기준	
전체	(243)	104	42.8	0.63	0.28	1.3
광역의회	(17)	17	100.0	1.00	1.00	3.4
기초의회	(226)	87	38.5	0.55	0.23	1.1

- (주요 성과)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보완사항) 자문위원회는 구성하였으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60개, 57.7%) 자문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가 없더라도 행동강령 이행현황 점검, 행동강령 준수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는 등의 노력 요구

《 주요사례 》

① [충청남도 의회] 내실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

- 충청남도 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현황 점검 결과 보고 및 적절성 검토,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검토 등 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자문위원회 운영

② [경상북도 의회] 법령상 자문위원회 역할 충실히 수행

- 행동강령 조례 이행현황 점검계획 및 결과 자문, 의회 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및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 등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역할과 기능에 충실

[6-2] 가점지표 :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기반 마련

- (평가 지표)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청렴업무 담당자의 교육 참여 여부 평가
- (평가 결과) 148개(60.9%)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에 참여
- (주요 성과) 신규 평가 대상기관 청렴업무 담당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평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여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업무 추진 기반 마련
- (보완사항) 지방의회 최초 전수평가에도 불구하고 95개(39.1%) 지방의회의 담당자들이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아 권역별 워크숍 개최 등 참석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6-3] 가점지표 :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 (평가 지표) 공공부문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4년 청렴컨설팅에 참여한 멘토기관을 대상으로 멘티기관의 종합청렴도 향상 정도와 멘토기관의 노력도를 평가
- (평가 결과) 1개 지방의회가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으로 참여(가점기관 1개)
- (주요 성과) 청렴도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우수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공공부문 청렴 수준 제고에 기여
- (보완사항) 청렴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수요 대비 지원 가능 역량에 한계가 있어 참여기회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주요사례 》

① 전라남도 의회

- 청렴컨설팅 멘티기관과의 자유회의를 2회 개최하여 멘티기관의 신규 청렴정책 컨설팅, 청렴노력도 지표 추진방안 자문 등 멘티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노력

[7] 감점지표

○ (평가 지표)

-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평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대국민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여부를 평가
-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현황 제출 및 위반자 조치현황 평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사건 협조도

○ (평가 결과)

-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청탁방지담당관을 미지정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지방의회 없음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72개 지방의회(29.6%)**에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기관 누리집에 기한 내 공개(감점기관 20개, 8.2%)

※ 전년도 미평가 기관(151개)은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감점 없음

-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현황을 **205개 지방의회(84.4%)**에서 제출(감점기관 38개, 15.6%)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노력)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결정 등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미이행한 지방의회 없음

< 기관 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 수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점수 (점)
		이행 기관 수	비율	이행 기관 수	비율	이행 기관 수	비율	이행 기관 수	비율	
전체	(243)	243	100.0	72	29.6	205	84.4	243	100.0	-0.2
광역의회	(17)	17	100.0	15	88.2	16	94.1	17	100.0	-0.1
기초의회	(226)	226	100.0	57	25.2	189	83.6	226	100.0	-0.2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대상 기관은 '23년 평가 대상기관 92개(광역 17개, 기초시 75개)

- (주요 성과) 모든 지방의회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위반신고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도 없는 등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 안착
- (보완사항) 입력안내 및 실태점검에도 불구하고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의회가 다수(38개, 15.6%) 있어 담당자 안내·교육 등 지속 실시 필요

《 주요사례 》

- ① [경기도 파주시 의회] 청탁방지담당관 운영방안 구체적 수립
 - 자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청탁방지담당관 직위 지정 외에 청탁방지담당관 역할 및 신고사건 처리 운영절차 명시, 운영계획 소속 부서원 배포 등으로 제도운영 내실화

[8] 시책 효과성 평가

○ (평가 지표) 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시책*에 대한 구성원의 효과성을 평가

* 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②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③ 청렴교육 이행, ④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⑤ 갑질(행동강령) 개선노력

-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타 노력도 지표와 달리 청렴체감도 설문 과정에서 관련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 반영

※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설문 실시

○ (평가 결과) '반부패 시책 효과성 평가'의 평균 점수는 62.0점

- 각 세부 항목별로는 '청렴교육 이행'에 대한 체감 인식이 63.3점으로 가장 높고, '갑질 개선노력'이 60.6점으로 가장 낮음

< 기관 유형별 지표 실적 >

구분	기관수	반부패 시책 효과성 평가(점)					점수 (점)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 노력	청렴교육 이행	신고자 보호노력	갑질 개선노력	
전체	(243)	62.8	61.9	63.3	61.3	60.6	62.0
광역의회	(17)	68.2	67.6	68.7	67.5	67.0	67.8
기초의회	(226)	62.4	61.5	62.9	60.8	60.1	61.5

○ (보완사항) 타 공공기관과는 구별되는 지방의회의 업무 및 구성원 특성 등을 반영한 청렴정책을 추진하여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기초의회의 갑질 개선 및 신고자 보호 노력 관련 내용 우선 추진 필요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 부패사건 현황

○ (감점 현황) 지방의회 감점 대상 부패사건은 총 19개 지방의회(7.8%)에서 23건 발생

- 감점 적용 지방의회당 평균 부패사건 수는 1.2건, 평균 감점은 2.4점

※ '23년 감점 대상 부패사건은 3개 지방의회에서 총 3건 발생, 감점 적용 지방의회의 평균 감점은 3.0점

< 기관 유형별 부패사건 감점 현황 >

구분	평가 대상 기관 수(개)	감점 기관(개)		감점 사건(건)		감점 현황(점)	
		기관 수	발생률(%)	전체 건수	감점기관 평균건수	전체기관 평균	감점기관 평균
전체	243	19	7.8	23	1.2	0.2	2.4
광역의회	17	3	17.6	3	1.0	0.1	0.7
기초의회	226	16	7.1	20	1.3	0.2	2.7

○ (금액 규모) 감점 대상 부패행위의 총 부패금액은 3억 4,985만 원

- 감점 대상 부패사건 발생 기관당 평균 부패금액은 1,841만 원, 부패행위자 1인당 부패금액은 1,521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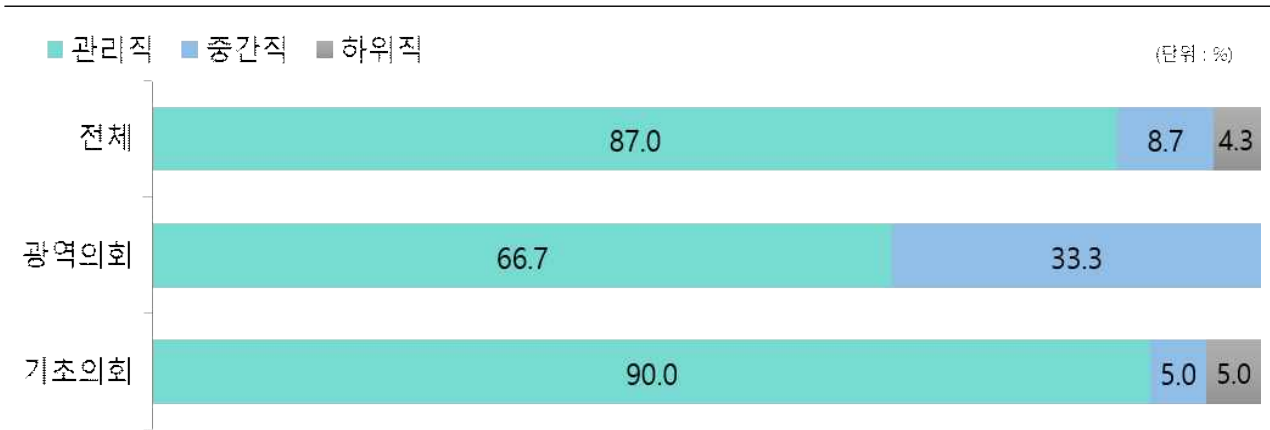
< 감점 대상 부패사건 기관별·행위자별 부패금액 >

구분	총 부패금액 (만원)	감점 기관 수 (개)	감점기관당 부패금액 (만원)	부패 행위자 수 (명)	행위자당 부패금액 (만원)
전체	34,985	19	1,841	23	1,521
광역의회	70	3	23	3	23
기초의회	34,915	16	2,182	20	1,746

□ 부패행위 내용

- (행위자 직위) 부패행위자는 관리직이 87.0%(20건)로 가장 많고, 중간직 8.7%(3건), 하위직 4.3%(1건)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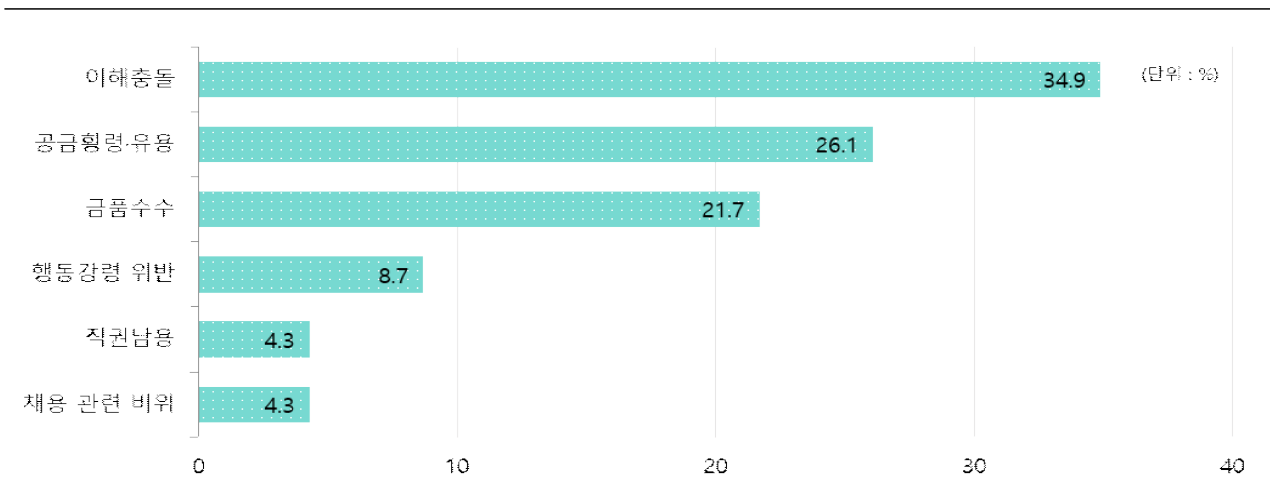
< 부패행위자 직급별 현황 >



※ 관리직 중 의원 비율은 95.0%(19건)

- (행위 유형) 이해충돌 34.9%(8건), 공금 횡령·유용 26.1%(6건), 금품 수수 21.7%(5건) 등의 유형이 전체 부패사건의 82.7% 차지

< 부패유형별 현황 >



※ '23년 부패행위 유형은 금품수수 66.7%(2건), 행동강령 위반 33.3%(1건)

VI 심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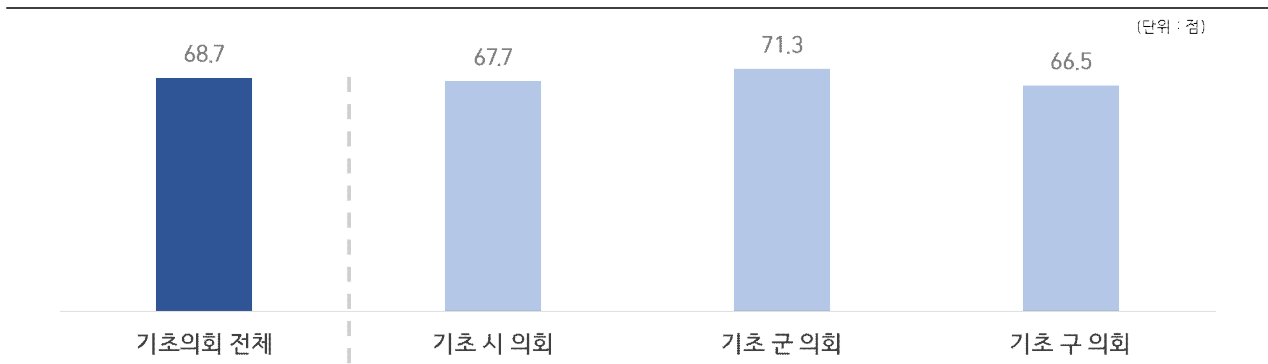
< 분석 배경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전수조사 첫해로 신규 평가대상 기관이 많은 기초의회의 기관 유형별 평가결과 세부 분석 실시

□ 기초 군 의회의 종합청렴도가 기초의회 중 가장 높은 수준

- 기초의회 종합청렴도 점수는 기초 군 의회(71.3점)가 가장 높고, 기초 시 의회(67.7점), 기초 구 의회(66.5점) 순

<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비교 >



- (영역별) 종합청렴도 및 청렴체감도 점수는 기초 군 의회(종합 71.3점, 체감 69.8점)가 높고, 청렴노력도 점수는 기초 시 의회(80.4점)가 높음
- 부패실태 감점 기관의 평균 감점 수준은 기초 시 의회(3.4점)가 가장 크며, 기초의회 전체의 평균 감점 수준(2.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 유형별 결과 비교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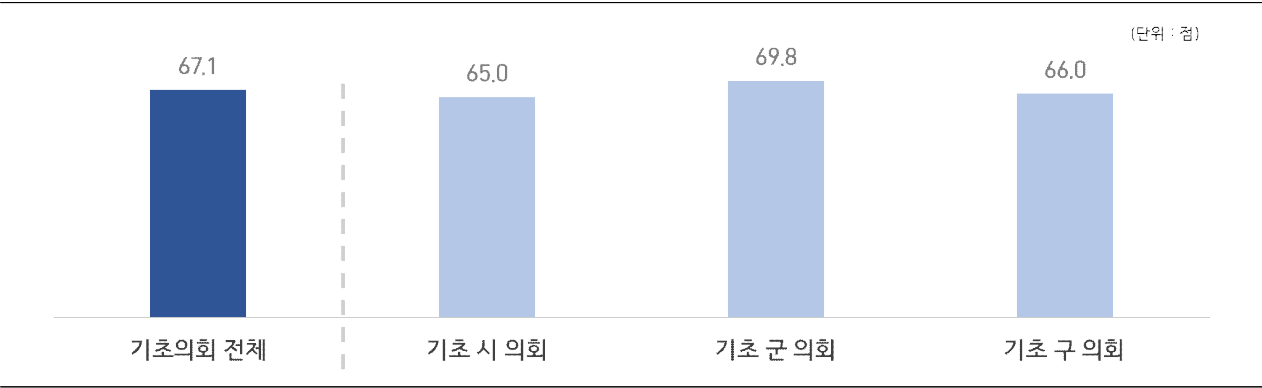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종합 청렴도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실태 감점	
				전체 기관	감점 기관
기초의회 전체	68.7	67.1	76.7	0.2	2.7
기초 시 의회	67.7	65.0	80.4	0.3	3.4
기초 군 의회	71.3	69.8	78.4	0.0	1.3
기초 구 의회	66.5	66.0	70.8	0.3	2.3

□ **청렴체감도는 기초 군 의회가 기초의회 평균보다 높은 점수**

- 기초의회 유형별 청렴체감도 점수는 기초 군 의회(69.8점), 기초 구 의회(66.0점), 기초 시 의회(65.0점) 순

< 기관 유형별 청렴체감도 점수 비교 >



-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는 기초의회 모두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가 가장 높고,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가 가장 낮음
- 기초 군 의회는 모든 항목에 대한 점수가 기초의회 평균보다 높고, 기초 시 의회는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 유형별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인식 항목별 비교 >

(단위: 점)

구분	기초의회			
	전체	시	군	구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72.6	71.2	74.7	71.8
인사 청탁·개입	72.3	70.0	74.8	71.7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67.6	65.9	68.9	68.1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65.4	63.9	66.6	65.6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73.0	72.0	73.9	73.0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68.9	66.9	71.5	68.0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74.6	72.0	76.8	74.8

- 의정활동 영역의 부패경험률은 기초의회 모두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가장 높고,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이 가장 낮음

- 기초의회 중 기초 구 의회가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패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관 유형별 의정활동 영역 부패경험률 항목별 비교 >

(단위: %)

구분	기초의회			
	전체	시	군	구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1.40	1.44	1.24	1.49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1.21	1.29	0.95	1.36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경험률	7.48	8.13	5.24	8.79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경험률	10.84	11.46	7.75	12.97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	20.05	20.36	13.55	25.73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	11.32	12.16	9.86	11.66

- 의회운영 영역의 항목별 점수는 기초의회 모두 '공용물 등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이 가장 높고, '외유성 출장'이 가장 낮음

- 기초 시 의회와 기초 구 의회의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항목 점수가 전체 기초의회 평균 점수보다 낮음

< 기관 유형별 의회운영 영역 항목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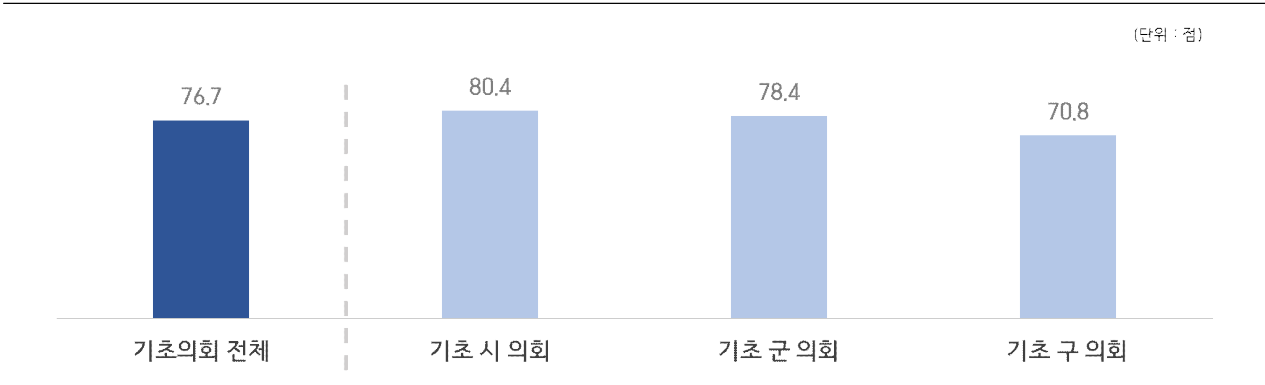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기초의회			
		전체	시	군	구
예산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70.8	69.7	72.8	69.5
	외유성 출장	62.9	60.8	65.9	61.6
	공용물 등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77.3	76.0	80.0	75.6
조직운영	투명한 업무처리	66.3	64.9	67.9	65.9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67.0	64.6	72.3	63.2

□ **청렴노력도 점수는 기초 시 의회가 기초의회 중 가장 높은 수준**

- 기초의회 유형별 청렴노력도 점수는 기초 시 의회(80.4점), 기초 군 의회(78.4점), 기초 구 의회(70.8점) 순

< 기관 유형별 청렴노력도 점수 비교 >



- 기초 시 의회와 기초 구 의회는 '부패 유발요인 정비' 지표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 군 의회는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모든 기초의회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이행을 위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됨

※ 광역의회와 비교했을 때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34.3점), 부패방지제도 구축(-13.8점),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12.4점) 지표가 특히 높음

< 기초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별 점수 >

(단위: 점)

구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구축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가점 지표	감점 지표	시책 효과성
기초전체	71.6	89.4	71.5	53.9	84.9	2.9	-0.2	61.5
시의회	72.5	95.3	78.0	56.1	88.1	3.5	-0.3	59.9
군의회	70.8	85.4	78.0	56.7	86.4	2.8	-0.2	66.7
구의회	71.5	87.7	56.5	48.1	79.7	2.2	-0.2	57.1

- 평가 대상기관 평가 결과 공개(~'25.1월, 기관 홈페이지) 및 공개 결과 제출(~'25.3월)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결과발표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 우수기관 및 담당자 유공 포상('25.2월 예정)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시 취약분야 분석·활용(~'25.5월)

1. 광역의회 : 17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3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경상남도 의회(▲1등급) 전라남도 의회(▲1등급)	경상남도 의회(-) 충청북도 의회(▲2등급)	경상북도 의회(▲1등급)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전라남도 의회(-)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급	대전광역시 의회(▲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의회(▲1등급) 충청남도 의회(-) 충청북도 의회(▲2등급)	전라남도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1등급) 충청남도 의회(-)	경상남도 의회(▲1등급) 광주광역시 의회(-) 대전광역시 의회(-)	
3 등급	경기도 의회(▲2등급) 경상북도 의회(▼2등급) 광주광역시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 울산광역시 의회(▼1등급)	강원특별자치도 의회(▲1등급) 경상북도 의회(▼2등급) 광주광역시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 대전광역시 의회(-) 울산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1등급)	경기도 의회(▲2등급) 대구광역시 의회(-) 부산광역시 의회(▲1등급) 서울특별시 의회(▲1등급) 울산광역시 의회(▼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충청남도 의회(▼2등급) 충청북도 의회(▲1등급)	
4 등급	강원특별자치도 의회(▲1등급) 부산광역시 의회(▼1등급) 서울특별시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1등급) 전북특별자치도 의회(▼1등급)	경기도 의회(-) 부산광역시 의회(▼2등급) 서울특별시 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의회(▼1등급)	강원특별자치도 의회(▲1등급) 전북특별자치도 의회(▼2등급)	
5 등급	인천광역시 의회(▼2등급)	세종특별자치시 의회(▼1등급)	인천광역시 의회(▼2등급)	

2. 기초 시 의회 : 75개 기관

※ 기관명 가나다순, 괄호 안은 '23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패	강원 동해시 의회(-) 강원 삼척시 의회(▲1등급) 경기 과천시 의회(▲1등급) 경기 동두천시 의회(-) 경남 사천시 의회(▲2등급)	경기 과천시 의회(▲1등급) 경기 동두천시 의회(-) 경남 사천시 의회(▲1등급)	강원 동해시 의회(▲1등급) 강원 삼척시 의회(▲1등급) 경기 광주시 의회(▲1등급) 경북 상주시 의회(▲3등급) 전남 여수시 의회(▲3등급)		
2 패	강원 강릉시 의회(▲1등급) 경기 광주시 의회(-) 경기 구리시 의회(-) 경기 김포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3등급) 경기 안산시 의회(▲1등급) 경기 여주시 의회(-) 경기 포천시 의회(-) 경남 김해시 의회(-) 경남 양산시 의회(▲1등급) 경남 진주시 의회(-) 경남 창원시 의회(-) 경남 통영시 의회(-) 경북 경주시 의회(▲1등급) 전남 광양시 의회(▼1등급) 전남 여수시 의회(▲1등급) 충남 논산시 의회(▲1등급) 충남 당진시 의회(-) 충남 보령시 의회(-)	= 강원 강릉시 의회(▲1등급) 강원 동해시 의회(▼1등급) 강원 삼척시 의회(-) 강원 속초시 의회(-) 경기 김포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2등급) 경기 안산시 의회(▲1등급) 경기 여주시 의회(▲1등급) 경기 포천시 의회(-) 경기 하남시 의회(▲1등급) 경남 김해시 의회(-) 경남 밀양시 의회(-) 경남 양산시 의회(▲1등급) 경남 진주시 의회(-) 경남 창원시 의회(-) 경남 통영시 의회(-) 경북 경산시 의회(▲1등급) 전남 광양시 의회(▼1등급) 전남 나주시 의회(-) 충남 논산시 의회(▲1등급) 충남 당진시 의회(-) 충남 보령시 의회(-) 충남 서산시 의회(▲1등급)	+	-	부패 실태 평가 (감점)
3 패	강원 속초시 의회(-) 경기 군포시 의회(-) 경기 남양주시 의회(-) 경기 부천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2등급) 경기 시흥시 의회(▼1등급) 경기 안양시 의회(-) 경기 양주시 의회(▼1등급) 경기 의왕시 의회(▼1등급) 경기 의정부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2등급) 경기 파주시 의회(▲1등급) 경기 평택시 의회(-) 경기 하남시 의회(-) 경기 화성시 의회(▲1등급) 경남 거제시 의회(-) 경남 밀양시 의회(▼1등급)	강원 원주시 의회(▲1등급) 경기 광명시 의회(▲1등급) 경기 광주시 의회(▼1등급) 경기 구리시 의회(▼1등급) 경기 군포시 의회(▲1등급) 경기 부천시 의회(▲1등급) 경기 수원시 의회(▲1등급) 경기 시흥시 의회(-) 경기 의왕시 의회(▼1등급) 경기 의정부시 의회(▲1등급) 경기 이천시 의회(-) 경기 파주시 의회(▲1등급) 경기 평택시 의회(-) 경기 화성시 의회(-) 경남 거제시 의회(▼1등급) 경북 경주시 의회(-) 경북 문경시 의회(-)	강원 강릉시 의회(-) 강원 원주시 의회(▲1등급) 강원 태백시 의회(▲1등급) 경기 김포시 의회(▼1등급) 경기 시흥시 의회(▼1등급) 경기 안산시 의회(-) 경기 여주시 의회(▼1등급) 경기 의왕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2등급) 경기 파주시 의회(-) 경기 평택시 의회(▲1등급) 경남 밀양시 의회(-) 경남 사천시 의회(▲2등급) 경남 양산시 의회(▲1등급) 경남 진주시 의회(▼1등급) 경북 경산시 의회(-) 경북 문경시 의회(▲1등급)		

구 번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3 번	경북 경산시 의회(-) 경북 문경시 의회(▲1등급) 경북 상주시 의회(▲1등급) 전남 나주시 의회(-) 전북 김제시 의회(▲1등급) 전북 남원시 의회(-) 전북 익산시 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1등급) 전북 정읍시 의회(▼1등급) 충남 계룡시 의회(▼1등급) 충남 공주시 의회(-) 충남 서산시 의회(▲1등급) 충남 아산시 의회(▲1등급) 충북 제천시 의회(-) 충북 청주시 의회(-) 충북 충주시 의회(-)	전남 여수시 의회(▼1등급) 전북 김제시 의회(-) 전북 익산시 의회(-) 전북 정읍시 의회(▼1등급) 충남 계룡시 의회(▼1등급) 충남 공주시 의회(-) 충남 아산시 의회(-) 충북 제천시 의회(-) 충북 청주시 의회(-) 충북 충주시 의회(-)	전남 광양시 의회(▼1등급) 전남 나주시 의회(-) 전남 순천시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전북 김제시 의회(▲1등급) 전북 남원시 의회(▼1등급) 전북 정읍시 의회(-) 충남 공주시 의회(-) 충남 보령시 의회(▼1등급) 충북 충주시 의회(▲1등급)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번	강원 원주시 의회(-) 강원 춘천시 의회(▼2등급) 경기 광명시 의회(-) 경기 안성시 의회(-) 경기 오산시 의회(-) 경북 구미시 의회(▼1등급) 경북 김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1등급) 경북 영주시 의회(-) 전남 목포시 의회(▼1등급)	강원 춘천시 의회(▼1등급) 경기 남양주시 의회(-) 경기 안성시 의회(▲1등급) 경기 안양시 의회(▼1등급) 경기 양주시 의회(▼1등급) 경기 오산시 의회(-) 경북 구미시 의회(-) 경북 김천시 의회(▲1등급) 경북 상주시 의회(▼1등급) 경북 안동시 의회(-) 경북 영주시 의회(-) 경북 영천시 의회(▲1등급) 전남 목포시 의회(-) 전남 순천시 의회(▼1등급) 전북 남원시 의회(▼1등급) 전북 전주시 의회(▼1등급)	경기 고양시 의회(▼1등급) 경기 광명시 의회(▼1등급) 경기 하남시 의회(▼1등급) 경기 화성시 의회(-) 경북 구미시 의회(▼2등급) 경북 김천시 의회(▼1등급) 경북 안동시 의회(▲1등급) 경북 영주시 의회(▼1등급) 전북 익산시 의회(▼2등급) 충남 서산시 의회(▲1등급) 충남 아산시 의회(▲1등급) 충남 천안시 의회(▼1등급) 충북 제천시 의회(▼1등급) 충북 청주시 의회(▼2등급)	
5 번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1등급) 경기 용인시 의회(▼1등급) 경북 영천시 의회(▼1등급) 경북 포항시 의회(-) 전남 순천시 의회(▼2등급) 전북 군산시 의회(▼1등급) 충남 천안시 의회(▼1등급)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경기 용인시 의회(▼1등급) 경북 포항시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충남 천안시 의회(▼1등급)	강원 속초시 의회(-) 강원 춘천시 의회(▼3등급) 경기 성남시 의회(▼1등급) 경기 안성시 의회(▼3등급) 경기 용인시 의회(▼2등급) 경남 거제시 의회(▼2등급) 경북 영천시 의회(▼2등급)	

3. 기초 군 의회 : 82개 기관

※ 등급 내 기관명 가나다순, 기초 군 의회는 '23년 평가 미 실시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전남 고흥군 의회 전남 보성군 의회 충북 진천군 의회	전남 보성군 의회 충북 진천군 의회	강원 평창군 의회 경북 청송군 의회 전북 장수군 의회	부패 실태 평가 (감점)	
2 등급	강원 평창군 의회 강원 화천군 의회 경기 가평군 의회 경남 창녕군 의회 경남 함안군 의회 경북 영덕군 의회 경북 청송군 의회 경북 칠곡군 의회 대구 군위군 의회 전남 신안군 의회 전남 완도군 의회 전남 장성군 의회 전남 장흥군 의회 전남 해남군 의회 전남 화순군 의회 전북 고창군 의회 전북 순창군 의회 전북 장수군 의회 전북 진안군 의회 충남 금산군 의회 충남 예산군 의회 충남 청양군 의회 충북 괴산군 의회 충북 음성군 의회 충북 증평군 의회	=	강원 철원군 의회 강원 화천군 의회 경기 양평군 의회 경남 남해군 의회 경남 창녕군 의회 경남 함안군 의회 경북 청송군 의회 경북 칠곡군 의회 대구 군위군 의회 대구 달성군 의회 전남 고흥군 의회 전남 담양군 의회 전남 완도군 의회 전남 함평군 의회 전남 해남군 의회 전남 화순군 의회 전북 순창군 의회 전북 진안군 의회 충남 예산군 의회 충남 청양군 의회 충남 태안군 의회 충북 괴산군 의회 충북 단양군 의회 충북 보은군 의회 충북 음성군 의회 충북 증평군 의회		+
3 등급	강원 고성군 의회 강원 양구군 의회 강원 영월군 의회 강원 인제군 의회 강원 철원군 의회 강원 홍천군 의회 강원 횡성군 의회 경기 양평군 의회 경기 연천군 의회 경남 고성군 의회 경남 남해군 의회 경남 하동군 의회 경남 합천군 의회 경북 고령군 의회 경북 영양군 의회 경북 예천군 의회	강원 양구군 의회 강원 양양군 의회 강원 인제군 의회 강원 평창군 의회 강원 횡성군 의회 경기 가평군 의회 경남 산청군 의회 경남 하동군 의회 경남 합천군 의회 경북 고령군 의회 경북 영덕군 의회 경북 영양군 의회 경북 예천군 의회 경북 의성군 의회 경북 청도군 의회 부산 기장군 의회	강원 고성군 의회 강원 철원군 의회 경남 창녕군 의회 경남 함안군 의회 경남 함양군 의회 경남 합천군 의회 경북 고령군 의회 경북 영양군 의회 경북 울릉군 의회 경북 의성군 의회 대구 군위군 의회 전남 강진군 의회 전남 곡성군 의회 전남 구례군 의회 전남 무안군 의회 전남 영광군 의회		-

구 번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3 페이지	경북 의성군 의회 대구 달성군 의회 부산 기장군 의회 인천 강화군 의회 전남 곡성군 의회 전남 구례군 의회 전남 담양군 의회 전남 무안군 의회 전남 함평군 의회 전북 무주군 의회 전북 부안군 의회 전북 임실군 의회 충남 부여군 의회 충남 태안군 의회 충남 홍성군 의회 충북 단양군 의회 충북 영동군 의회 충북 옥천군 의회	인천 강화군 의회 인천 용진군 의회 전남 곡성군 의회 전남 구례군 의회 전남 무안군 의회 전남 신안군 의회 전남 영암군 의회 전남 장성군 의회 전남 장흥군 의회 전남 진도군 의회 전북 고창군 의회 전북 무주군 의회 전북 부안군 의회 전북 임실군 의회 전북 장수군 의회 충남 금산군 의회 충남 부여군 의회 충남 홍성군 의회 충북 영동군 의회 충북 옥천군 의회	전남 완도군 의회 전남 해남군 의회 전북 무주군 의회 전북 부안군 의회 전북 순창군 의회 전북 진안군 의회 충남 태안군 의회 충남 홍성군 의회 충북 보은군 의회 충북 옥천군 의회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페이지	=	강원 양구군 의회 경기 양평군 의회 경남 거창군 의회 경남 남해군 의회 경남 의령군 의회 경남 하동군 의회 경북 성주군 의회 경북 청도군 의회 대구 달성군 의회 부산 기장군 의회 인천 강화군 의회 전남 담양군 의회 전남 영암군 의회 전남 진도군 의회 전북 완주군 의회 전북 임실군 의회 충남 청양군 의회 충북 괴산군 의회 충북 단양군 의회 충북 영동군 의회	+	
5 페이지	경남 산청군 의회 경남 의령군 의회 경북 봉화군 의회 경북 성주군 의회 경북 울릉군 의회	경남 의령군 의회 경남 함양군 의회 경북 봉화군 의회 경북 울릉군 의회 전남 영광군 의회 충남 서천군 의회	강원 양양군 의회 경남 산청군 의회 경북 봉화군 의회 인천 용진군 의회 전남 함평군 의회	

4. 기초 구 의회 : 69개 기관

※ 등급 내 기관명 가나다순, 기초 구 의회는 '23년 평가 미 실시

구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1 등급	광주 동구 의회 부산 수영구 의회	광주 동구 의회 대전 대덕구 의회 부산 수영구 의회	부산 남구 의회 서울 용산구 의회	
2 등급	광주 남구 의회 대구 남구 의회 대구 서구 의회 대구 수성구 의회 대전 대덕구 의회 대전 동구 의회 부산 강서구 의회 부산 남구 의회 부산 부산진구 의회 부산 북구 의회 부산 사상구 의회 부산 사하구 의회 부산 연제구 의회 서울 강남구 의회 서울 구로구 의회 서울 금천구 의회 서울 서초구 의회 서울 성북구 의회 서울 종로구 의회 서울 중랑구 의회 울산 남구 의회 울산 동구 의회 울산 북구 의회 울산 중구 의회 인천 계양구 의회 인천 연수구 의회	=	+	-
3 등급	광주 광산구 의회 광주 서구 의회 대구 달서구 의회 대구 동구 의회 대구 북구 의회 대전 서구 의회 대전 유성구 의회 부산 금정구 의회 부산 동구 의회 부산 동래구 의회 부산 사상구 의회 부산 영도구 의회 부산 중구 의회 서울 강북구 의회 서울 관악구 의회 서울 동작구 의회 서울 마포구 의회 서울 성동구 의회	광주 광산구 의회 광주 서구 의회 대구 달서구 의회 대구 동구 의회 대전 서구 의회 부산 금정구 의회 부산 남구 의회 부산 동구 의회 부산 동래구 의회 부산 사상구 의회 부산 사하구 의회 부산 영도구 의회 서울 강남구 의회 서울 강북구 의회 서울 금천구 의회 서울 동작구 의회 서울 성동구 의회	광주 남구 의회 광주 서구 의회 대구 서구 의회 대구 수성구 의회 대구 중구 의회 대전 대덕구 의회 대전 서구 의회 대전 유성구 의회 대전 중구 의회 부산 강서구 의회 부산 금정구 의회 부산 동구 의회 부산 동래구 의회 부산 부산진구 의회 부산 북구 의회 부산 영도구 의회 서울 강북구 의회	부패 실태 평가 (감점)

구 번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평가 3	서울 용산구 의회 서울 은평구 의회 인천 동구 의회 인천 부평구 의회 인천 서구 의회 인천 중구 의회	서울 영등포구 의회 서울 용산구 의회 서울 은평구 의회 서울 중구 의회 울산 동구 의회 인천 동구 의회 인천 부평구 의회 인천 중구 의회	서울 노원구 의회 서울 마포구 의회 서울 송파구 의회 서울 중랑구 의회 인천 계양구 의회 인천 부평구 의회	부패 실태 평가 (감점)
평가 4	광주 북구 의회 대전 중구 의회 부산 해운대구 의회 서울 강동구 의회 서울 광진구 의회 서울 노원구 의회 서울 도봉구 의회 서울 동대문구 의회 서울 송파구 의회 서울 양천구 의회 서울 영등포구 의회 서울 중구 의회 인천 남동구 의회	= 광주 북구 의회 대전 유성구 의회 대전 중구 의회 부산 중구 의회 부산 해운대구 의회 서울 강동구 의회 서울 관악구 의회 서울 도봉구 의회 서울 동대문구 의회 서울 마포구 의회 서울 서대문구 의회 서울 송파구 의회 서울 양천구 의회 인천 남동구 의회 인천 서구 의회	+ 광주 광산구 의회 대구 달서구 의회 대구 동구 의회 대구 북구 의회 부산 해운대구 의회 서울 강서구 의회 서울 광진구 의회 서울 도봉구 의회 서울 동대문구 의회 서울 동작구 의회 서울 영등포구 의회 서울 중구 의회 인천 남동구 의회 인천 동구 의회 인천 중구 의회	
평가 5	대구 중구 의회 부산 서구 의회 서울 강서구 의회 서울 서대문구 의회 인천 미추홀구 의회	대구 중구 의회 부산 서구 의회 서울 강서구 의회 서울 광진구 의회 서울 노원구 의회 인천 미추홀구 의회	부산 서구 의회 서울 강동구 의회 서울 서대문구 의회 서울 성동구 의회 서울 양천구 의회 인천 미추홀구 의회	